



[뉴스] 삼성의 미래 'AI' 한국을 AI 거점으로 인력 1000명 양성 02

metro



Economy

코스피	2024.46 (-5.23)	코스닥	657.46 (+8.79)
금리 (20년 국채)	1.94 (0.00)	환율 (USD/KRW)	1138.10 (-1.50) (1일)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

文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사회안정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단 한명도 차별 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기회 보장되는 나라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가 포용을 말한다.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복지·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며 “포용적 사회·포용적 성장·포용적 번영·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국민 노력으로 우리는 ‘잘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지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며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이 ‘평화의 한반도’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면서 “서해 5도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하고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남북미의 확고한 신뢰 속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눈앞에 와있고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간간해진 심사에 내년 무더기 상폐 우려

재감사땀 추가비용에 허리 휘청

新외감법 도입

코스닥 상장사 부담 가득

올해 상장사 의견거절 급증 상장폐지절차 보류소송 늘어 감사의 신뢰성 문제 제기도

“디지털포렌식(저장매체와 인터넷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조사 기법)에 개선 기간 대부분이 소요돼 재감사 착수가 지연됐다. 거래소는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기업 측 요청을 거절했다.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2018년 9월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앞 소액주주 집회)

코스닥 상장사인 모다 등은 최근 증시 퇴출에 반발해 결국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정리매매 중단)을 낸 상태다. 2019년엔 이런 광경이 더 흔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부터 ‘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시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1천억원 이상	기타
시행시기	2019년 감사보고서	2020년 감사보고서	2022년 감사보고서	2023년 감사보고서

/코스닥협회

법)이 시행되면서 회계법인들이 앞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회계법인 감사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면 반발하는 기류가 퍼지고 있다.

감사인 권력이 강화되면서 늘어난 시간과 비용 부담에 불만 심사 대상 기업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2018년 9월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앞 소액주주 집회)

◆간간해진 회계법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을 받은 11개 코스닥 상장사 중 4개 기업의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

된 상태다.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감사의견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법원의 결정은 이례적이라든가 증권가의 설명이다. ‘외감법’이 강화되기에 앞서 회계법인들이 코스닥 기업에 대해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증권업계 분석이다.

작년 결산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던 상장기업 80%가 재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다. 전년 보다 두 배로 급증했다.

개정된 외감법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모든 상장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적용을 받는다.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

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이다. 이때 감사법인 교체과정에서 과거 부실감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관련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엄격한 잣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내년에는 더 큰 상장폐지 대란이 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는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 기준을 높였지만 내년부터는 외감법에 따라 감사 영역이 넓어지고 세밀해지기 때문이다.

갈등도 표면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회계법인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99건으로 전년(81건)대비 18건 늘었다.

◆투명성 제고는 좋지만, 결국 비용

새로운 외감법 시행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제도 중 하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다. <3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南北 적대행위 중지 첫 날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1일 파주 오두산전망대에서 시민들이 북한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액공모 100억까지 허용... 사모펀드 ‘49인룰’ 폐지

금융위 ‘자본시장 혁신과제’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도입 등 자금공급체계 전면개선 초점

앞으로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액공모가 100억원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비상장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됐던 ‘49인룰’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당정협의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기업금융시장은 정책보증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자본시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며 “자본시장을 대졸시장과 경

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한도는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30억원 이하의 경우 기업의 허위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 조항을 신설하며, 30~100억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사모펀드 발행 범위는 확대된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상관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한다.

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 발행이라면 광고나

SNS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해진다.

이런 개선방안은 오는 12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되면 내년 1분기 중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BDC 제도도 도입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 거래소에 상장한 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다. 비상장 혁신기업은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는 비상장기업에 투자하기 쉬워진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늘린다. 금융투자업 종사자나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해준다.

/안상미기자 smahni@